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현 제도의 문제점, 과연 이대로 좋을까

Center for Property Rights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
11월 5일
미디어펜 재산권센터
김규태 간사

강원도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보전금 협약 문제로 (주)미시령동서
관통도로의 지배회사인 국민연금공단에 소송을 준비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

강원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림

협약기간은 2036년까지로 강원도는 2006년 7월 미시령터널 개통 이후
현재까지 187억원, 연평균 23억4000만원을 보전함

참고로, 미시령터널은 총사업비 1090억원 중 약 960억원을 민간투자자로
추진해 2006년 5월에 개통한 유료도로

2017년 동홍천~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향후 20년간 미시령터널의
실제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17%로 떨어짐

(출처 : 강원개발연구원 '동서고속도로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결국 보전 비율이 늘어나, 강원도는 지금까지의 10배 수준인 240억원을
보전해야 하며 이 추세로는 2036년 협약 만료기간까지 5420억원을 지급함

정부는 지난 200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MRG 협약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국민연금이 미시령터널을 인수할 당시 이 부분은 협약내용에 반영되지 않음

Center for

강원도	(주)미시령동서관통도로
“협상이 잘 이뤄질 경우 법적인 조치는 중단할 계획, 끝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약의 문제점을 들어 소송을 준비”	“강원도의 사업구조화 재협약에 응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교통량 감소라는 미래 예측을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1.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꾀한다는 면에서 강원도가 대표하는 것은 정부/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
2. 강원도 vs 국민연금공단 = 강원도민 150만명 vs 국민연금 가입자 2천만명
3. 계약은 계약
4. 문제는 MRG협약. 협약을 성사시킨 조건이 정작 시간이 지나 문제로 떠오름
>> 전지전능하지 않은 정부의 한계, 공무원의 한계
5. 그런데 사례에서 엿보이는 정부/지자체/공무원/관의 기본적인 태도
6. 이렇다면 민간투자사업을 왜 할까...?

1. SOC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의 지속적인 축소

2. 현재 SOC 민간투자 시장은 침체

3. 여론의 악화 (부정적 여론 형성)

4. 정부의 재정 방어적 정책 추진

5. 활성화 여부는 불투명

1.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맞춰서 장사를 어떻게든 하려다 보니
(정부재정의 부족, 그래도 SOC는 공급해야)

2. 급전이 필요해서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서 일단 썼는데...
(민간투자사업 제도 확대, 민간투자 받음)

3. 시간이 지나 이자를 갚으려다 보니
(MRG협약에 따른 보전금 지불)

4. 다른 이들보다 고리로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 실정이 부담스럽고
(저금리 기조 지속, 지난 10년간 달라진 경제상황)

5. 예상했던 것보다 장사/돈벌이가 잘 되지 않아
(수요예측 실패, 각종 개발계획 변경 및 신규 추가로 인한 SOC 환경 변화)

6. 기존 투자자에게는 적당한 원금/수익을 주어 지금까지의 대출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추진)

7. 이러한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계약에 관한 사업지정을 취소하고 당사자에 대한 의혹을 널리 알린다.
(경남의 마창대교 공익처분 추진, 감사 후 세금탈루/탈세 의혹 제기)

·
·
·

이 사람, 본인이 원하는 만큼 과연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을 수 있을까...?

관건, 문제의 요지는

실질적인 투자자인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를

어떻게 SOC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인하느냐

이다!

하지만 이는

“ 자업자득으로 인한 동.상.이.똥. ”

인센티브는 성과의 기본적인 결정요인인데,
인센티브는 상호 간의 “계약” 으로 인하여...
규정되고 신뢰가 구축된다.

하지만 일방이 계약을 존중하지 않을뿐더러

언론플레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태도로 인하여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가
서로 간에 쌓여있지 않다!

1. 수요예측 부정확성 (리스크)

2. 경제 환경의 변화 (리스크)

3. 정부가 계약(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데에서 나온다.

1.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약속의 파기는 자신에게도 해로운 포퓰리즘이다.

2. 현 민간투자사업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

3. 재구조화나 refinancing에서의 심사제도는
민자사업이 원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옳다.

4. 재산권센터의 제안 : 민자사업자에게 자유와 책임을
모두 부여하는 것. 이익이든 손실이든 민간이 모두
책임을 지도록. 독점가격 책정에 대한 우려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대체 언제까지

수요도 없는 SOC가 지어지고

온 국민 납세자들이 그 비용을 메워주는
악순환을 연출할 것인가...?

여기에 참석하신 기재부, KDI, 그 외 수많은
관계부처 전문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